

道 전년도 중앙공모 4353억원 결실

총 122개 사업 선정... 2016년比 147억원 증가 열악한 재정여건 속 성장 견인 밑거름 기대

전북도는 작년 연말까지 중앙공모 사업 선정에 박차를 가한 결과, 12월 중에 선정된 8개 사업, 국비 718.3억원 확보를 포함, 2017년 한해 중앙공모사업에 총 122개 사업에 선정되어 4,353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전년실적(4,206억원) 대비 147억원(3.5%)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렇게 확보된 국비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북지역의 성장동력에 필요한 필수재원으로, 지역성장을 견인하는데 큰 밑거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북도가 이와 같은 중앙공모사업의 성과를 거둔 요인으로서는 초기 준비단계부터 응모단계까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단계별 대응방법, 방침 결정 등 체계적인 사업추진 및 관리

였다. 또한 도, 시군, 대학, 연구소 등 유관기관이 함께 정보공유,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수시 공모사업의 신속한 대응 등이다. 올 한해 선정된 공모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삼라농정 등 농생명 분야(36건, 1,233.2억), 토탈관광 및 문화체육 분야(25건, 231.3억), 탄소산업 및 성장동력 분야(17건, 1,056.1억), 일자리창출·고용안전 분야(10건, 138.6억), 환경·안전·복지 및 기타 분야(34건, 1,693.9억)으로 나타났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는 2018년도 부처별 예산안 및 주요업무보고 자료 등을 분석하여 실국별 소관부처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고, 수시로 실시되는 공모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중앙부처의 수시동향 파악과 선제적대응을 통해 선정률을 높이고, 지방비 매칭에 대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들이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오리·산란계 농장 방역 잘하고 있나

도, 2회 걸쳐 실태 일제점검 AI 차단·조기종식 팔걸어

전북도는 AI 추가발생 및 조기 종식을 위해 방역취약 대상인 오리 및 산란계 농장 384호에 대해 29일까지 방역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1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에 걸쳐 시군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가금농장 전담공무원 등을 동원하여 대상농장에 대해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지시를 한 후 1월22일부터 1월29일까지 8일간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도 농축수산식품국 및 시군 공무원 128명으로 2인 1개반의 64개반을 편성하여 1월22일부터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반에 의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1일 1농가 점검 및 점검차량 소독에 철자를 기할 방침이다. 또한, 효율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전북도는 1월 22일 오전 10시 전북 도청 중회의실에서 점검반 구성원에 대해 농장방문 시 지켜야할 방역수칙, 점검요령 및 점검결과 조치사항을 교육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무술년 키워드 “한반도 평화·국민 안전” | 문 대통령 새해 소망 밝혀 국민위해 정부 역량 집중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는 북한의 참가로 평창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남북 평화 구축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국제 사회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해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각계각층 초청 신년 인사회에서 북한 신년사를 언급하면서 “평창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획기적인 계기로 만들자는 우리의 제의에 호응한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경숙 여사가 2일 청와대 영빈관 앞에서 신년 인사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나라와 정부가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 가겠다. 국민의 삶이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무술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해를 ‘참으로 극적인 한 해’라고 표현하면서 “2017년은 우리 역사에 촛불혁명이라는 위대한 민주주의 혁명의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전 세계를 경탄시킨 세계사적인 쾌거였다”고 촛불 민심에서 출범한 새 정부 의의를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작년에 세계 주요국가 정상들과 회담하고 다자정상 회의에 참석하면서 촛불혁명이 우리 외교의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것은 바로 대한민국에 대한 존중”이라며 “저는 이제 우리 스스로를 강대국의 주변부처럼 바라보면서 왜소하게 인식하는데서 벗어나 강한 중견국가로서 좀 더 주체적이고 당당해질 때가 됐다고 느낀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외교 자세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새해에도 국민의 손을 굳게 잡고 더 힘차게 전진하겠다”면서 “지금 국민들은 ‘나라는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내 삶도 바뀔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계시다. 올해는 우리 국민들께서 ‘나라가 달라지니 내 삶도 좋아지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는 일은 정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반듯하게 세우는 일”이라며 “국민들이 국가와 정부, 나아가 대한민국 공동체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다. 국민이 애국할 수 있는 뿌리를 만드는 일이요, 국민통합과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더 큰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적폐청산 기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새해에는 노사정 대화를 비롯한 사회 각 부문의 대화가 꽃을 피우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면서 “작년에 우리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회갈등 사안을 성숙하게 해결했다. 노사 간에도 상생을 위한 뜻 있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마음을 모으면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일 것이다. 여야 간의 대화, 국회와 정부와의 대화도 한층 더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면서 “우리 정치가 비탄의 경향이 아니라 서로 잘하기 경쟁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못해낼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국제한식조리학교

올해부터 학점은행제 본격 시행

전북도는 2일 전주국제한식조리학교가 교육부로부터 학점은행제 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제한식조리학교는 학점은행제 인정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 6월, 식품재료학 등 19과목(과목당 3학점) 총 57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 7월에 시설, 교감사, 교육과정 등에 대한 1차 현장평가 수행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교육과정 커리큘럼에 대한 최종평가를 거쳐 12월 27일 최종 학점은행제 인정기관으로 지정됐다. 학점은행제는 정규대학에 다니지 않고도 교육부가 인정하는 학점취득기관을 통해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80학점을 취득하면 2년제 전문학사, 140학점을 취득하면 4년제 학사학위가 주어진다. /김진성 기자

국제한식조리학교는 내년부터 식품재료학, 식음료개론, 식품 및 조리원리, 외식산업 창업 및 경영, 한식조리실습 등 총 19개 지정과목을 교과과정에 포함하여 수업을 실시하고, 모두 이수할 경우 과목당 3학점씩 총 57학점을 취득하게 된다. 부족한 학점에 대해서는 타 기관 교육과정 및 사이버 과정 등과도 연계하고, 향후에는 지정과목을 확대하여 재학생들의 원활한 학위취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조호일 농식품산업과장은 “국제한식조리학교가 대학수업수준의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학점 미인정으로 신입생 모집에 한계가 있었던게 사실이었다”며, “이번 학점은행제 시행으로 국제한식조리학교의 신입생 모집 확대가 기대되는 등 더욱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주민조례 제개정 청구, 온라인 서명 가능해진다

그동안 현장서명만 가능했던 주민들의 조례 청구를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스마트 주민조례개폐 청구’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조례개폐 청구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법 규범인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는 제도다. 학교 급식관리조례 제·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조례를 직접 청구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현장에서만 받을 수

있어 청구 요건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까지 발의된 건수도 총 223건에 그쳤다. 이에 행안부는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공인전자서명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전자서명 시스템의 절차적 기반 마련 차원이다. 개정안에 따라 청구인이 지자체장에게 스마트 조례개폐 청구 시스템 이용을 요청하면 온라인 서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